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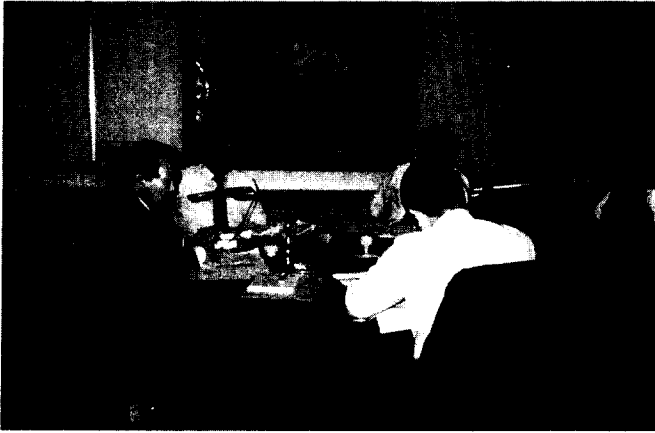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방향과 정부의 역할

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외의 각종 규제는 기업의 이익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겨울호에서는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방향과 정부의 역할」에 관한 포럼을 마련하였다. 토론은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자세, 리우선언 이후 기업의 대내외 환경전략, 환경산업의 전망과 대기업의 진출 분야,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의 연계방안, 환경연구에 있어 민간기업의 역할 순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결과, 민간기업들은 철저한 환경경영 방식을 채용하고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규제에 순응하고 환경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적 유인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참석자 : 노용희 이사장(배달환경클럽)
 신용배 교수(한양대 토목공학과)
 김태웅 회장(환경기자클럽)
 안영재 국장(환경처)
 조문현 상무(주인천제철)

일 시 : 1993. 11. 5. 금요일

장 소 : 현대경제사회연구원 회의실



노용희 : 오늘 바쁘신 시간에 와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이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 우선 배성동 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할 주제는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기업의 참여 방향에 대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 환경보전에 대한 국내기업의 자세를 다루고자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는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룩했지만, 우리 성장은 양적 성장으로 질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환경의 파괴나 오염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사고방식이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달라져서 기업들의 환경 마인드도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점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측에서 나오신 안국장의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환경보존을 위한 기업의 자세

안영재 : 환경보전과 기업의 자세와 관련, 나름대로 시기 구분을 해보면, 1980년대 중반과 1990년대초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기업의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환경청에서 점검반을 각 주요공단에 파견해 이전에는 방치되었던 기업의 공해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기업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싹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우회의가 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부각시키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바로 1년 전쯤에 폐쇄사건이 일어나면서 기업의 환경에 대한 자세라든가 인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폐쇄사건과 리우회의 이후에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업들은 이제 환경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는 것만이 아니고, 기업이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를 국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의 환경선언에서 보듯이 최고경영자들도 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문제에 실제로 대응하는 능력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령 정부는 기업에게 환경조직을 갖출 것을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전국의 5만 5,000여 개의 배출업소 가운데 課 以上の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1,200 개밖에 안됩니다. 물론 대기업 중에는 별도의 환경연구원을 거느린 기업도 있고 기업들의 환경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나,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는 것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응배 : 환경문제의 주인공이 기업만은 아니며 그 책임도 기업만이 져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회 흐름의 옳고 그름은 그 때에 그 사회를 이끌었던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수십년에 걸쳐 우리 사회를 지배하였던 잘못되었던 가치관의 탓이라고나 할까요. 사회전반에 걸쳐 잘못된 점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기업의 환경에 대한 자세도 옳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도록 법의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비용 절약으로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경제원칙에 입각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해이하였던 사회기강 하에서 기업이 자진해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자세는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으로 우리 국민이 느낄 정도의 변화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잘못되었던 가치관 때문에 기업인을 포함한 많은 사회구성원들이 그 사회가 안고 있는 병폐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병폐가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지배해 왔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고자 한 많은 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았으며 그 사람들이 상대적 소외감과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가 과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용기를 내서 이런 이야기를 언젠가는 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제가 오늘 이런 악역을 맡게 되어 오히려 서글픈 감이 없질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는 언제부터인지는 몰라도 준법정신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공공의 상호이익과 상부상조의 이상을 추구하기 보다는 아전인수적 사고나 행동에 젖어 남에게 끼치는 피해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극도의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기 보다는 타인을 기만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과거도 있었습니다. 민주적이기 보다는 권위주의적이며, 개방적이고 성취적이기 보다는 폐쇄적이고 기회주의적이었습니다. 합리적·과학적인 사고보다는 비합리적이고 주먹구구식인 사고방식들이 다 이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사고방식들이 오염행위 정도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자행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태웅 : 제가 환경처 출입기자가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출입하면서 매달 환경처가 발표하는 배출 업체 적발 기사를 썼어요. 현재 적발 업체의 수는 많게는 1,000 개에서 적게는 700~800여 개 정도인데 그러한 수치는 2년 전 처음 환경처를 출입할 때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리우회의라는 세계사적인 환경 이벤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출업소들의 적발된 숫자는 별 차이가 없다는 점은 서글프지만 엄연한 현실입니다. 또 하나, 저희가 자주 쓰는 것이, 한참 거론되고 있는 재활용 기사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금년 초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잘 아시다시피 이 제도는 대상품목을 제조한 업체가 미리 돈을 내고, 폐기물을 회수한 후에 예치한 돈을 되찾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내유수의 대기업을 비롯, 대부분의 기업들은 예치금을 납부하되 찾아가지 않는 것이 태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치금으로 낸 돈이 해당 회사가 수거하는 비용보다 싸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제도상의 문제일지도 모르지만, 기업들의 환경윤리와도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환경영향평가제도도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회사에 대기업은 물론이고 중소기업도 상당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동안 제 자신이 2 년동안 쓴 기사가 엄청나고 그에 대한 별척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말단 사원이 한 서너 달 징역살이를 하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몇 일 전에 나온 기사입니다만, 기업의 환경투자가 매년 축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분명히 리우환경 이후에 나온 통계입니다. 195 개 상장회사의 환경설비투자는 올해 전체의 설비투자의 5.5%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10월 중순경 구라과 출장시 세계 유수의 화학회사인 스위스의 산도스그룹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92년 한 해 동안 환경부분에 투자한 금액이 총자본투자의 10%가 넘고, 이러한 환경투자액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71억 원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포항제철이 550억 원으로 1위를 했어요.

이와 같은 통계자료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 기업들이 진실로 환경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물론 기업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를테면, 5共 때까지만 해도 환경은 안보차원에서 다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문에 환경에 관한 기사가 한 줄 나오기도 어려웠죠.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환경쯤은 성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6共에 들어와서 환경이 본격적으로 언론을 타기 시작했고 특히 페놀사건 이후에 더더욱 가속화 되었습시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갖가지 통계를 미루어 보면 아직도 환경보전을 희생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환경이 국제 무역의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한 것이 현실인데도 사실상 기업의 환경투자가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경제정책의 차원에서 재고할 문제입니다.

조문현 : 아까 안국장께서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점은 저도 동감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는 경제개발이 우선이고 기업도 역시 환경오염문제를 경시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부 대기업들은 앞으로 환경오염문제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시작했으며, 1990년도에 와서는 정부의 환경행정의 강화, 즉 단일한 「환경보전법」이 분법 체계화되고 환경오염 대책이 강화되면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91년도 낙동강 페놀사건이 환경문제 인식에서 획기적인 계기가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기업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현재 대다수의 대기업들은 앞으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다고 할 만큼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환경규제는 앞으로 기업의 이미지 관리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방금 김기자께서 환경투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수한 환경처 자료에 의하면 전산업의 설비투자에서 환경투자가 점하는 비율이 1988년 0.6%에 불과했는데 1991년과 1992년에는 각각 8.5%와 7.7%로 높아졌습니다. 이처럼 환경투자가 2년 사이의 단기간에 무려 10 배 이상이 대폭 증가했다는 것은 기업이 얼마나 다급했는지를 증명해 주는 근거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급속한 환경투자의 증가는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에서 비롯한 것이지요.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환경관련 규제와 정책은 선진국 수준에 뒤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업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도 환경기술이나 정보의 낙후, 자원조달의 어려움 때문에 기업의 환경대응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또 환경산업은 장치산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비에 대한 검토·설계·제작·운반·설치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제약요인 때문에 정부가 단기간 내에 환경정책을 강화하는 경우, 기업들이 따라가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가령 장치산업의 경우, 설계에서 설치에 이르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야, 3년 길게 되면 5년까지 걸립니다. 따라서 환경투자비율이 1988년 0.6%에서 1991년 8.5%로 높아진 데에는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투자에 대해서 아까워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기술, 정책, 자금조달 등 제반 지원이 강화되면 기업의 환경투자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노용희 : 고맙습니다. 지금 네 분이 말씀하신 것을 한 번 정리를 해보면 입장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만, 신박사가 말씀한 준법정신의 결여, 우리 김기자가 말씀한 환경윤리의 부족 등 아직도 기업체들이 체 구실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견해가 큰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의 조화 단계 그것도 성장을 전제로 한 환경보전이라고 하는 조화 단계까지는 이른 것이 아니냐고 판단됩니다. 그런데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열린 리우회의에서는 178 개 국 대표가 모두 찬성해서 리우선언을 채택하였고, 이 선언에서는 개발과 보전, 혹은 경제와 환경이 대립되는 모순적 개념이 아니고 양립할 수 있고, 그리고 통일

된 개념으로 보는 이른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 Environmental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을 앞으로 지행해야 한다는 데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제 지구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문제와 결부된 중대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의 개념을 ESSD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공통 인식하에 참가국들은 온난화방지조약, 생물다양성보호조약과 같은 중요한 조약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방향으로 대내외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메워 나가야 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엔 학계의 신박사께 먼저 부탁을 드리지요.

리우선언 이후 기업의 대내외 환경전략

신응배 :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환경협약에 대한 기업의 대응이 내부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외부로 나타나는 대응은 없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대응전략은 대내외부로 나누어 구상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수출과 관련하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나 특정물품 사용의 규제에 대한 대응전략이 필요합니다. 즉, 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을 지키지 않고는 도저히 수출을 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업체는 물론 국민들도 이것을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아직도 시간이 있는 듯이 국민에 대한 교육과 계몽을 게을리 하는 정부의 안일한 태도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상품의 수출과 관련하여서도 어느 특정한 협약에만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 얼핏 보면 자동차의 환경문제로는 CFC와 관련된 몬트리올의정서만 있는 듯이 여깁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생명주기를 통해 볼 때 자동차가 유발하는 환경문제는 훨씬 광대합니다. 즉, 자동차를 만들 때에 생산과정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물론이고 필요한 모든 원자재의 생산과정에서의 환경오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어 자동차의 운행 단계에서 배출되는 오염문제, 즉 에너지 효율성까지 따지면서 수입조건이 까다로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뿐입니까. 자동차가 수명을 다 했을 때 폐차 처분단계에서 생성될 물질들의 오염성 또는 위해성 여부에 따라 수입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고 최소한 최종처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수입 전제조건 등에 완벽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상계관세와 같이 우리 자신의 느슨한 환경규제 때문에 겪게 될 징벌이 있습니다. 이는 대응 전략의 대내적 구상과 직결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의 환경 규제도 점진적으로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의 대응은 대내외를 막론하고 환경친화적 생산기술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SD 전략에 입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SD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국가는 SD형 경제사회를 만들어 가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생활양식의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산업체에서는 윗분들만 알아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SD를 실천할 사람은 생산현장 및 작업장에서 일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단계별 목표와 이를 달성키 위한 수단의 강구 등 종합적 장기 계획의 수립을 서두를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용희 : 고맙습니다. 지금 신박사가 말씀하신 대로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가 채택한 대기정화법을 보면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수출하려고 해도 대단한 변화가 없으면 곤란하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발표한 신경제 5개년계획의 환경부문 계획에 SD 개념이 들어가지 않아 실망을 했습니다. 정부는 기업체에 대해서 어떠한 식으로 기대를 걸고 있고 격려를 하고 있는지 정부 입장을 한 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영재 : 리우선언의 전체가 SD였고 리우선언에서 채택한 「아젠다21」도 그러합니다. SD에서는 사실 환경론자들보다는 오히려 기업이 중요한 주체로 부상하였고, 또 정부에서도 이제 환경전담 부처뿐 아니라 개발관련 경제부처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D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목표의 설정, 기법, 기준 등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개발을 할 때 어떻게 그것을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간단한 표현이면서도 전체로 포괄하는 말이 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환경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국제적 동향에 맞추어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신경제 계획의 환경분야가 너무 환경에 치우쳐

있고, 신경제 전체를 관철하는 ESSD의 기본적인 원칙이 우선 제시되고 그 다음에 계획이 나왔어야 한다는 좌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신경제계획의 환경대책에 환경부문만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산업구조 조정문제와 국제화에 대비한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대응전략과 관련해서는 리우회의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국제환경협약이 기업에게 환경보전을 위한 대의명분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기업의 이익과도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기업들의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몬트리올의정서, 기후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멸종위기에 있는 야생동식물의 보호협약,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바젤협약 등이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연구개발 활동을 하는 기업도 많습니다.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망되는 분야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지구환경문제와 관련된 신물질이나 신소재의 개발에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CFC의 경우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어 일부 대체물질이 개발되었고, 또 생물다양성협약과 관련해서 생명자원 특히 유전자원의 需給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입한 멸종동식물보호협약도 이러한 야생동식물을 원료로 한 약제의 무역을 규제하기 때문에 제약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유해 제품을 생산·사용·폐기할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환경친화적인 물질로 바꾸는 그러한 대체물질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제적으로 그린라운드를 배경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무역규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또 국가별로는 특정국에서 수입된 제품이 오염공정에 의해서 생산되거나, 환경기준이 낮은 만큼 환경비용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경쟁우위만큼은 관세로 상쇄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미국은 멸종동식물보호협약에 근거해 코뿔소의 뿔이나 호랑이의 뼈로 약을 만드는 나라로 한국, 대만, 중국을 지목하고 이들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매기거나 수입을 막는 그런 범조문까지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업으로는 이러한 국제적인 협약의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준, 배출기준, 공해공장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나가야 하겠으며, 특히 에너지와 원료를 절약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폐기물의 재활용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노용희 : 요새 국제사회에 유행되고 있는 말 가운데 '그린 매니지먼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에서 흔히 사용되는 '요람으로부터 묘지까지'라는 말은 환경문제에서는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경영관리자나 제조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는 기업의 환경관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까 조상무께서는 환경설비는 돈이 많이 들고 장치산업이 되어서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정부시책을 따르는 데 적어도 3~4 년내지 5 년은 걸린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린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우리 기업들의 대응노력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조문현 : 현재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안국장께서 말씀하신 리우회의라든가, 더욱이 근간에는 ISO에서도 환경표준화를 서두르고 있어 앞으로는 무역에 있어서 환경문제가 크게 대두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는 있으나, 지금 안국장께서 말씀하신 그 과제들은 기업들이 당장 대응해서 따라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정부나 대기업을 연구소에서 좀더 상세히 연구를 해서 기업이 어떤 방향과 어떤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국내 5만 5,000여 개 배출업소 중에서 환경조직을 가진 기업은 1,200 개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내기업들이 빠른 시간 내에 환경조직을 정비하기 위해 대기, 수질, 폐기물, 진동, 소음 등 분야별로 전문가와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으며, 이들 전문인력으로 하여금 국내법규·규제에 대한 분석과 연구, 외국의 환경정보에 대한 수집·분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업소의 경우, 지역주민 문제가 큰 현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미지 관리와 對民 협력관계의 개선을 위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감시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가는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현실보다는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가령 대기업 중에서 철강업체들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도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에너지의 절약과 효율적인 사용에 좀더 적극적인 연구와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용희 : 환경분야를 포함해서 각종 정보의 부족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학계, 기업계, 정부 시책의 동향에 대해 일반에게 알려주는 것은 미디어로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의 대내외 환경전략에 대해 언론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김태웅 : 저희 기자들은 새로운 어떤 개념을 소개할 때 우선 본인부터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ESSD의 개념은 아직도 선명하게 머리 속에 그려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쓰긴 써야겠고 해서 저너름대로 고심을 하면서 서구적인 개념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아 동양적인 개념으로 풀이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가령 ESSD는 자연에의 합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테면 옛날 모습이긴 합니다만, 시골의 초가집은 그 뒷산하고 기가 막히게 조화를 이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현대의 고층아파트 지역에서는 그런 감흥을 거의 맞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서구에서도 제가 몇 번 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3년 동안 특파원을 할 때 토론토 근교의 싸이언스 센터를 간 적이 있습니다. 계곡에 설치된 에스카레이터는 자연의 일부인 것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나라에서 그런 걸 못봤기 때문에 이거 멍청한 친구들이구나 생각했으나 제가 환경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지금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처럼 주변의 자연환경을 배려하는 경우, 물론 건설비가 많이 들 것입니다. 건설비를 줄이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캐나다 사람이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형을 살리면서 값싸게 짓는 방법이 바로 기술개발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분당 신도시의 고층 아파트군들이 과연 그 주변 지형까지도 배려해서 건설되고 있는지 극히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정보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2월 리우회의를 한 달 앞두고 프레스 센터 주관으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외무부의 환경 담당과장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외무부 관리가 “너희들(환경처) 케냐에도 나가 있고 제네바에도 나가 있는데, 도대체 리우회의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정보가 뭐냐?”고 환경처를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니까 보고를 했으나 묵살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늦을 뿐만 아니고 설령 입수한 정보도 부처 간에 교환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문제가 기업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정보전쟁의 첨병이 되고 있습니다. 왜 기업은 정부와 민간연구소한테 정보까지도 의존하려고 하는지, 중요한 정보를 정부가 안 내준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만 있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실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울산화학은 우리나라에서 CFC를 생산하는 유일한 회사일 겁니다. 몬트리올의정서에서는 CFC의 생산과 사용을 단축하겠다고 상당히 오래 전부터 예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시된 기간 동안에 울산화학은 CFC 생산시설을 증설했습니다. 이러한 정보 부재는 해당기업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울산화학에서도 외국에 주재원이 나가 있고 조금만 노력을 했으면, 이미 公文化된 사실을 입수하기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마 하다가 화를 자초한 것이지요. 물론 울산화학측에서도 CFC와 동시에 대체물질까지도 개발하려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CFC를 개발하는 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또 그 이익이 회수도 안된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투자재원은 기업 내부자금 말고도 정부나 은행 등 기업 외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지원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정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용희 : 리우회의에서 우리나라는 152번째로 늦게 서명을 했는데, 그 원인도 정보부재에 있다고 봅니다. 리우회의 준비를 4 차례 하는 가운데 경제부처, 환경처, 외무부에서 파견한 사무관급 대표들이 두 달 동안 계속된 뉴욕회의에 일주일 단위로 교대로 참석하는 북새통에 「아젠다21」에서 무슨 내용이 문제다 하는 것조차 장관에게 통보가 잘 안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지간한 국제회의에는 전부 현지 주재 외교관들이 참석하니까 외무부 장관에게는 보고가 되어도 환경처 장관에게는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울산화학 건은 상공부에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무렵에 어떤 세미나에서 상공부의 어느 국장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하면 1986년 당시 국가가 계획했던 사업은 증설을 해도 좋다고 되어 있다. 울산화학은 여기에 해당되니까 증설이 가능하다.”고 말하더군요. 즉, 우리는 세계생산량의 0.1%밖에 생산을 못하고 사용량은 많으니까 수입을 해야 하고, 그때는 2000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는 결정이 안 났으니까 당장 공장을 지어서 생산량을 늘리자는 것이었죠. 안일한 생각이었죠. 사실 이 조항은 소련의 제안

으로 들어갔던 항목이거든요. 정부지시에 의한 생산시설의 증설은 계획경제에서는 가능하나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 더 기업측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經團連이 지구환경헌장을 채택한 게 1991년입니다. 이 현장에서 각 기업체는 중역급을 長으로 하는 환경조직을 설치하고 회사별·제품별로 자재부터 폐기물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환경기준과는 관계없이 독자적인 환경기준을 설정해서 연간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경우에는 현지 법률이 요구하는 환경기준과는 관계없이 일본정부의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자사의 환경기준을 지켜 나간다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경련도 작년 정부의 환경정책선언에 앞서 한 달 전에 환경선언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 선언들을 자사의 기업윤리로 받아들이면서, 또 이제 우리 기업들도 다국적 기업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구환경선언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해외투자업체들이 국내에서 돈벌이하듯이 환경문제에 배려하지 않고 현지에 진출하거나, 개발도상국인 경우에 별로 당장은 규제가 엄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하다가는 10년 이내에 철수해야 하는 불상사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경련의 자세는 안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금년에 그만 두었습니다마는 전경련 자문위원을 20년 하는 사이에 환경세미나는 겨우 두 번 했는데 위원장 외에는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그 분들은 아직도 성장과 환경보전을 상충관계로 보기 때문에 성장을 하려면 환경문제를 거론해서는 안된다는 박대통령의 아이디어를 추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다음 토론 주제로 넘어가기로 하지요. 환경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종래 생각으로는 이제 점점 환경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 불이익만 오는 것 같지만 그린라운드라 계기가 돼서 어떤 분야, 특히 환경산업 분야는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고 봅니다. 현대그룹은 조선, 자동차, 기계 등 중후장대한 산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환경산업의 전망과 대기업의 진출 가능한 분야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은 아마 정부에서 먼저 말씀하는 게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환경처가 물고 가야 할 일이지요.

환경산업의 전망과 대기업의 진출 분야

안영재 : 환경산업의 전망은 한마디로 아주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도 환경산업은 아주 좋은 산업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다만 안타까운 것은, 예를 들어서 폐기물처리업이 돈벌이가 좋은 사업일 경우, 폐기물처리업자가 폐기물 처리를 제대로 하고서 수지를 맞추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환경산업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전망이 아주 좋은 산업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희 환경처에서는 환경산업을 오염방지시설업, 폐기물처리·재활용산업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린테크놀로지나 그린테크놀로지도 광의로 보면 환경산업에 포함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환경산업보다는 산업기술 분야에 포함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오염방지 시설을 기준으로 한 환경산업은 여태까지 과거 10여 년 간 대략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보여 왔습니다. 공사실적도 1988년 2,800억 원에서 1991년 5,900억 원, 1992년 8,900억 원으로 급속한 신장세를 보였으며 해외수주도 1988년 986억원, 1991년 506억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외진출 전망도 밝습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를 촉진하고 있는 중국의 환경설비 수요가 급증할 전망이고 중동의 산유국도 유망한 진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제에서는 주로 환경 기초시설 확장에 중점을 두고서 8조 원 가량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환경산업은 전망도 좋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거의 영세한 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으로서는 아직 투자요인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현재로서는 거의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하는 경향이 있고 또 기술과 인력도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기업에서는 앞으로 특히 폐기물 분야에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규모가 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산업은 투자 능력과 신기술 개발 능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외국에서도 대기업들이 폐기물처리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노용희 : 혹시 「아젠다21」의 지구환경기금(GEF : Global Environmental Fund)과 관련하여 우리가 기술이나 재정지원을 받을 혜택이 전혀 없는 나라입니까?

안영재 : GEF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재정지원을 해야 할 나라입니다. GEF의 분담률, 기술분야, 기술이전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원칙만 결정이 된 상태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논의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기술이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일인당 GNP가 3,000 달러 이하인 개도국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급속한 공업화 과정을 겪은 국가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용희 : 사람들이 소로길 생활을 하다 신작로가 생기니까, 나루터에 다리가 놓여지게 되어 뱃사공들이 밤낮 한탄만 하고 앉아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꼭 그 뱃사공 같아요. 새로 생긴 신작로에 타고 갈 자동차 운전을 하든지 하다 못해 수레를 끌고 갈 생각은 하는 것 같지 않아 답답합니다. 원대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업 체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조문현 : 저는 환경산업 분야에 근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산업 분야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입장입니다. 아까 안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국내 오염방지 시설업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오염방지 시설은 기술을 도입해 시공한 설비가 대부분으로 기술도입 의존도는 일본, 미국, 독일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오염방지 시설업의 기술 수준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자체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보지만, 어느 정도 선진 기술을 모방해서 오염방지 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는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청정기술이나 기초 기술면에서는 초기단계에도 진입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환경산업 분야의 전망은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환경산업분야에 진출하려는 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의 조화, 환경규제 정책의 강화, 국제협약의 체결, 환경보호를 통한 기업이미지 관리의 중요성과 같은 환경적합형 경영의 중요성이 앞으로는 더욱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환경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습니다.

노용희 : 신박사께서, 평소에 기업가들이 고정관념만 벗어나면 돈벌이할 기회가 많이

있는데, 왜 이걸 못하나 하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 번 소개해 주시죠.

신용배 : 기술의 낙후성에 대해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망이 밝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도 하면서 일면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반대한다는 것은 전망이 밝지 않다는 이야기보다 시장 전망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뛰어드는 기업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싶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체 개발된 기술이 별로 없을 정도로 기술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오염 방지 기술의 대부분은 제품을 만드는 공정과 함께 외국에서 도입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도입기술을 완벽히 소화하여 우리의 것으로 정착시키는 점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기술까지도 확실하게 우리의 것으로 소화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실수들은 물론 기업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 많은 부분이 정책, 행정제도 등의 미비에도 큰 책임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정부의 정책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는 조급함보다는 이미 도입된 기존 기술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는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생활과 일의 질을 따지지 않고는 SD가 주도하는 사회를 만들어 갈 수가 없을 것으로 압니다. 물량적인 성장에만 신경쓰지 말고 예산의 일부를 도입 기술의 정착과 국산화에 배정함으로써 완벽한 우리기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낮은 정도의 기술일지라도 완전한 소화를 거쳐 우리 것으로 만드는 저력이 있을 때 고도 기술의 소화에 착수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술의 낙후성은 저가입찰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공사의 수주 관행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하에서는 시설물의 질적 수준의 저하는 물론이려니와 기술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의 촉진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낙후성은 자업자득이라고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기업이 적절한 수익을 낼 때 비로소 기술개발의 여력도 생기는 것이라 생각되며, 이런 노력을 통하여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대내외적인 진출이 가능해지며 아울러 성공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망이 밝다는 데 저도 절대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마는 그건 제대로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대내적으로 제대로 안해왔고 아직도 제대로 한다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사회에서 어떻게 전망이 밝다고 보겠느냐 하는 겁니다. 제대로 한다고 보면 절대적으로 전망이 밝지요. 한 가지 이유만 갖고도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했으니 할 일이 태산같

이 많을 수밖에요. 우리의 대기업은 지금부터라도 기술축적과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림으로써 대내외적 기술수요에 대응할 태세를 갖추어야 하며 그렇게 되었을 때의 진출 분야와 관련산업의 전망은 어느 분야보다도 밝다고 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할 때 SD는 기술 이전의 문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SD는 본질적으로 정신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D가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만 사고전환이 가능합니다. SD 교육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요합니다.

기업의 진출분야와 관련하여 너무나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분야를 구태여 지적해 이런 분야와 저런 분야가 좋다고 얘기를 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SD사회에서는 하이테크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로우테크도 필요합니다. 소위 적합기술이라는 것도 앞으로 얼마나 필요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재래식 오염물질을 줄이는 데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 아직도 낙후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 특히 산·학·연의 공동연구가 필요합니다. 첨단기술로는 유해성 폐기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분야가 유망합니다. 독성제거 방식으로는 생물학적, 물리학적, 화학적인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선진국에서 최근 많이 연구하는 분야가 열분해법입니다. 열분해법 기술은 유해 오염물 중에서도 독성이 강하고 잔류성이 강한 다이옥신과 살충제, 제초제 등의 처리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 전망 측면에서 SD와 관련된 연구 분야는 비단 환경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첫째, 진정한 의미의 SD 세계경제에서는 석유에 의존하는 화학산업이 아니라 탈석유의 화학산업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거의 모든 제품이 석유정제에서 얻어지는 기초원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경오염 원단위가 높습니다.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R&D와 환경기술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관련 연구로, 지금까지와 같이 시추해서 어디에 에너지가 매장되어 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아주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래식 에너지 즉, 석유에너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의 경제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동차의 연비개선이 그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환경산업의 전망과 기업의 진출분야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계획과 전략의 설정이 시급

할 것으로 봅니다. 필요 기술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기업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오염원에 대한 대책 등이 완벽하게 포함되는 종합계획이어야 합니다.

노웅희 : 언론계에서 볼 때 지금 이 시점에서 “야 이거 돈벌이하기 좋은 분야가 많은데, 왜 기업들은 가만히 있을까?” 하는 그런 것이 좀 없습니까?

김태웅 :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정책이 다 마찬가지로이겠지만, 세 가지 측면에서 보충해야 할 것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의 진정한 의지, 기업의 자세, 국민의 시민의식 등 세 측면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은 나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것이고 또 우리 현 세대뿐만이 아니고 후손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범정부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을 보존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산 배정 문제에서 정말로 의지가 있다면 환경부문에 많은 예산을 주어야죠.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상당히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분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그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가 고속전철을 건설한다고 했을 적에 국민의 편익을 위한 측면이 물론 큼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환경도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쉽사리 결정을 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나름대로 어디다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것이나 고심은 했겠지만, 그러나 환경을 보전하는 측면, 더군다나 그것을 ESSD라는 측면에서 과연 충분히 숙고를 한 끝에 결정을 한 것인지를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측면에선 이윤추구와 기업윤리를 묶어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윤추구란, 기업은 돈벌이가 되면 어디든 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로 환경산업이 돈벌이가 되는 것인가는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환경규제 정책과 세계적인 환경보호의 흐름이 있고, 또 쾌적한 생활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매우 크기 때문에, 환경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 자연적인 추세대로 해도 아까 안국장이 말씀하신 그 정도의 수요 증대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문제가 갑작스럽게 국민 관심사로 부각이 되고, 직·간접적인 압력에 의하건 혹은 자체내의 필요

성에 의해서건 간에, 관심 표명은 되지만 정말로 돈벌이가 될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이미 대기업에서 참여를 했을텐데, 여전히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그것을 전업으로 하는 중소기업들입니다.

국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괜찮고 옆 집에서 들려오는 소음에 대해서는 반발 하는 것이 현 우리나라의 국민수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자동차 타고 가면서 많이 목격하는 것이 공초를 막 버리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 낚시를 굉장히 좋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디 지방여행 갔다 오다가 명색이 환경처 출입기자인 저에게 “자네 저 낚시터의 쓰레기를 보게. 저렇게 쓰레기를 버린 사람을 단속하기 위해 낚시면허제를 도입해서 사용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감을 하면서도 “너는 하나 버리고 다른 사람은 열 개 버렸지만 그래도 같이 치워야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하려면 돈 내서 치워 가게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당수의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아직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흔히 얘기 하는 것처럼 높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식이 높다라는 것은 말뿐이 아닌 책임과 그것을 이행하는 실천력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위스 산도스社의 환경 정책의 예를 잠깐 인용하겠습니다. 이 회사의 환경목적은 다음과 같은 세 원칙에 입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avoid’입니다. 즉,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reduce’입니다. 즉, 오염물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리량을 최대한 가급적 줄인다 하는 얘기이고 셋째, ‘recycle’입니다. 즉, 발생한 오염물질은 최대한 재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 환경보전형 생산공정을 도입했지요. 물론 여기에서도 오염물질은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의 오염처리 공정을 살피기 위해 그 회사의 지하실에 있는 폐수처리장을 가보았습니다. 이 폐수처리장은 바로 산도스가 1986년도에 일으킨 라인강 오염사고를 계기로 해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저희도 2 년 전인가 그랬지만, 거기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났는데, 현재 두산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산도스社는 수질보전을 위해 엄청난 투자를 하였고 이제는 자사의 독특한 모델을 개발해서 앞으로는 이것을 판매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문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사고가 날지 모르지만 사고에 좌절하지 않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더 나아가겠다고 하는 자세에, 저를 포함한 방문기자단은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노용희 : 환경처 예산이 금년에 약 1,000억 원 정도인데 지금 서울시 강남구 일 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0억 원이에요. 환경정책을 다루는 환경처 예산이 페놀사건 이 나고 이벤트가 생겨서 막 떠들어대도 별로 안 늘어나는데, 이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환경정책이나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 연계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죠. 조상 무께서는 기업체는 R&D를 통한 자체 기술개발보다는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사오는 것이 훨씬 더 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자체 기술과 환경정책의 개발에서 기업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공동연구를 하는 방안에 대해 평소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의 연계방안

조문현 : 말씀하신 대로 기업의 R&D는 별로 없기 때문에 기업들은 학계나 연구기관에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사실 기업들은 요즘 외부용역을 가능한 한 많이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입장에서 그동안 환경관리를 하면서 문제가 되어 협조를 구해야 할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소들이, 환경관련 규제나 정책이 기업활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해주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또 지금까지는 성능 위주로 소재 개발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성능 위주보다는 환경을 배려하는 소재 개발 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김기자께서도 민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즘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국민들이 무조건 기업활동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입장에서 비판과 아울러 기업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는 홍보방안도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독일등 선진국에서는 초등이나 중등교육 때부터 환경에 대한 교재를 개발해서 역사학이나 사회학과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교육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중장기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국민수준을 한 차원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초·중고등학교의 환경교육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용희 :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중학교에 환경과목이 생긴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반대예요. 그것이 독립된 과목으로 있어서는 안되고, 국어나 산수 문제를 환경적으로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지식만 가르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환경이나 자연과 친화적인 생활은 국어시간에 글의 내용을 통해서, 산수시간에 실습을 통해 배워야 되겠지요. 아까 부분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G7하고 관련하여 학계의 입장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응배 : 저는 과거 국책연구소에서 1970년대 초부터 16년간 근무하였습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환경오염을 거론하는 일은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도 산업발전과 함께 각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과 피해로 인한 손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KIST와 산업체 간에는 강력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 공동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큰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도 합니다. 당시 대학에서 환경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환경공학을 정규적으로 공부한 인력도 전국적으로 몇 명 안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후 환경오염 문제가 점증하면서 더 이상 감추고 있을 단계를 벗어났으며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환경의식이 달라졌고 환경오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정책에 큰 변화가 있었으며 환경공학과 과학분야 인력도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특히 팔목할 만한 일은 대학, 특히 공과계열을 중심으로 환경 관련 학과가 많은 대학에 신설되었으며 정부에서도 환경관련 연구비를 확대 책정함으로써 산·학·연 모두에서 환경연구가 활성화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산·학·연의 공조체제가 특정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아직도 그 협조체제는 연약하며 종합된 체계하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가 해결하여

야 할 환경 문제에 비하여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전지구적 환경문제와 관련한 무역장벽 문제 및 국내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많은 환경 관련 과제 특히 21세기 복지사회와 질적 향상을 위한 수려한 환경의 성취와 보전, 기계적 고도 산업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될 정신 순화적 차원에서의 여가 선용 기회의 필요성 등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환경 관련 과제들이 종합적인 공조체제를 갖춘 산·학·연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설계 기법의 창출 및 시공기술의 창의적 개선 및 시설의 운전, 운영 차원의 효율성 제고 등, 이론적 연구뿐만 아니라 실제 적용기술의 개선과 실용성 제고 등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정책적 구상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이지 원칙론에의 합의만 도출되면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기적 안목에서의 공조체제는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연구인력 활용은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모품비와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게 될 장학금과 강의 시간을 제외한 교수들의 최소한의 인건비만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노용희 : 환경정책을 개발하려면 국립환경연구원만 가지고는 안되고 무언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관계로 지금 모처럼 한국환경기술개발원은 박사급 두뇌를 10여 명씩 확보하고 있으니 잘 키워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지요.

안영재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우선 돈이 문제입니다. 재원이 있어야 환경연구도 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원 확보책으로서 희망적인 것의 하나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거둬 들이는 것입니다. 그 사용 용도 중에 중요한 항목이 환경과학기술비와 연구개발비입니다. 앞으로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해마다 적지 않게 징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서 상당부분이 어떤 형태로든 환경연구나 환경기술개발 쪽으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환경특별회계라는 새로운 장치가 앞으로 마련되면 환경예산이 좀 융통성있게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G7프로젝트, 즉 국·공립 연구기관, 학계, 민간이 모두 참여하는 그야말로 야심적인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7프로젝트에서는 1992년부터 2001년까지 환경기술개발 분야에 대해 총 2,30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미 1992년도에 15개 과제에 66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채택된 과제를 보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官·學·研이 정말 협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 연구기관, 학계, 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얼마나 서로 잘 협조를 하고 공동노력을 하는 역할 분담이 있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또 이를 위해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여태까지 뚜렷한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만 우선 G7을 통해서 産·學·研의 공동노력의 기반을 확립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환경기술개발원에 대해서 좌장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희로서는 이것을 시작할 때 정부의 환경정책에서 취약한 부분을 연구하면서 학계와 민간기업과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기대하고 설립했습니다. 설립한 지도 얼마 안되어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처로서는 이 환경기술개발원에 대한 뚜렷한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원이 우리가 기대한 기능을 하게 된다면 정말 정부, 대학, 기업의 연구활동이 효율적이고 상호협조적인 체계 하에서 시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기술개발원 문제에 대해서 환경처로서도 기관의 위상과 재원 등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니 학계나 기업은 물론,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 이 대목에 대해 제 자신이 잘 모르기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우선 産·學·研을 연계시키는 연결 고리 노릇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것이 정해져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책입안 기관인 정부가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분야가 상당히 취약하기는 하지만 현재도 마땅히 해야 하고 앞으로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가 분명하다면, 역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노용희 : 1976년 OECD에서 발간한 일본 환경보고서에서는 일본이 공해대국에서 공해

방지 선진국으로 변모한 이유로 첫째, 언론의 역할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셋째 민간단체의 역할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언론이 환경문제에 기여하는 게 많죠. 하지만 제 개인뿐 아니라 다 그럴거라고 생각하는데 언론이 이벤트 중심으로 되어 불만입니다. 기사가 언제나 소킹해서 국민이 놀랄 정도가 아니면 기사가 안돼요. 그러니까 수도물 못 마신다 하는 기사가 나가면 전부 믿어버리는 식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공부 안하는 신문기자 때문이고, 좋게 말하면 오보하도록 왜곡된 정보를 주는 학자가 잘못입니다. 최근 민간단체들이 언론의 그러한 속성 때문에 이벤트를 만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계도하기보다는 정부는 특정지역 주민들의 남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에 대해, 특정 민간환경단체가 조정하고 있다고 몰아붙이기 일쑤고, 기업가들은 기업가대로 이들 주민들을 떠두른 근로자와 똑같은 집단으로 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단기적인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기업가 눈에 장기적인 현명을 얘기하는 환경론자들의 얘기가 먹혀 들어갈 까닭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환경운동을 하려면 호응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맨주먹으로 입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신문에 이름 석자가 오르내려야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사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나 기업이 민간환경단체를 보는 시각과 함께, 또 민간환경단체들이 반기업활동을 해야 자기가 설 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민간환경단체들은 대안 있는 투쟁을 하고, 기업가는 주민의 목소리를 단순히 지역이기주의를 선동해서 자기 위치를 굳히려려고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정부는 정부대로 민간환경단체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나라 민간환경단체의 활동 방식에 대해 불만이 있지만 재정적인 도움 없이 일을 하려는 자세만큼은 높이 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환경단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30만 원 내외의 월급밖에 안 받고 있어요. 재원은 독지가들이 대기도 하고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회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반기업 활동에서부터 벗어나 시야가 좀더 넓어져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활동하자'는 생각이 확산돼 분위기가 상당히 좋아졌고, 특히 황산성 장관이 취임한 이후 본인도 과거에 그런 활동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간환경단체에 대해 상당히 너그러워지고

다 좋은데 이제 좀더 정말 20년, 30년, 100년 후의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기업과 정부에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상황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유리하다고 보입니다. 적어도 기업가도 개발과 환경의 조화론 입장까지는 수긍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화론 가지고도 국제 동향에 대응하기는 힘들게 된 정세를 알려서 기업가의 의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주의 경영이 돈벌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되도록 무언가 연구를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린(Green) GNP에서 보듯이 양적인 것보다 질적인 것을 측정하는 기법들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그러한 기본적인 연구보다는 기업가에게 먹혀들어 갈 수 있는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이 오늘 토론의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환경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기업의 환경연구 방향

조문현 : 과거 경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용역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대학연구소가 어떤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다 갖추고 있느냐가 문제지만, 설사 그런 시설이 없다 해도 우수한 두뇌가 있으니까 공공 연구기관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기업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어떤 실험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90% 이상 성공이 되길래, 파이롯트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100% 확실하다는 자신을 갖고 이론적인 뒷받침을 받아야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줄 것이 아니냐 해서 대학연구소를 찾아 다녀 봤어요. 그런데 교수들도 그렇고 연구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환경보전의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국민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정부를 의식 안할 수 없고 하니까 과제 내용을 보더니 대부분 용역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KIST의 한 분하고 모태 학교의 교수 한 분하고 해서 두 분한테 연구용역을 드려서 그 결과를 이용해서 결국은 환경처장관의 우선심사권 추천서도 받고 특허까지 냈습니다. 그 후 관련설비를 지난 10월

부터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상당히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민간기업에서 연구한 것도 정부기관에서는 좀 인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정부는 민간기업의 연구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려는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기업연구소에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나 대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나오는 연구결과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니깐 결국 인정을 받으려면 그 두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업연구소의 연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인정을 하고 뒷받침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지나친 요구일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산업별 연구까지도 매우 포괄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령 철강산업 연구를 예로 들면, 철강산업의 일반적인 경향과 기술정보 등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기업에 필요한 것은 철강산업 중에서 특수강, 전기로, 종합제철, 열연계통, 냉연계통, 조광류 생산계통 등 기업현장에 밀착된 구체적인 정보와 기술연구 들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는 식으로 기업 스스로 정보를 입수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 정보를 분석해서 대처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모든 정부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먼저 정보를 입수했으면 이를 기업에 제공해 주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응배 : 지금 총론과 각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토론에서는 상당히 개괄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각론까지도 상세하게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개괄적 서술과 추상적 내용을 지양하고 단계별로 과정이 분명히 제시된 수행 지침 형태의 종합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환경 관련 국제모임에서도 항상 강조되는 것이 행동지침서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대기업 연구소들의 역할은, 종합적인 계획에서 뚜렷이 확립된 목적과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기 위한 수단들이 상세히 언급되는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정립되어야 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의 역할은 전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연구소의 역할이 특히 강조되지 않으면 안될 분야로 다음의 네 분야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첫째로 기존 기술의 효율성 제고 분야, 둘째가 신기술 개발 단계에서의

파이롯트 실험을 통한 적응성과 범용성 실험 분야, 셋째로 개발기술의 경제성 평가와 효율성 제고 분야 및 네번째로 개발기술의 대외적 판매 촉진과 건설관련 분야 등 입니다.

노용희 :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규제를 푸는데 무언가 착각을 하고 있지 않나 합니다. 국제적으로 행정규제 완화가 주류가 된 것은 자유방임시대에 시장경제에 방임하니까 막히는 부분이 생겨서 정부가 개입하게 되었고, 정부가 관여를 하다 보니까 관료조직의 특성 때문에 막히는 부분이 생기고, 이런 정부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규제완화를 시도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경제원리에 입각한 것이니까 경제관계는 풀어도 좋지만 그렇다고 사회복지행정, 환경정책 등을 풀어도 좋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사실 업계에서는 자꾸 경제불황을 내세우면서 그 원인을 정부가 관여해서 그렇다고 몰아세우고 특히 과거 거품경제시대의 사고방식에 젖어 땅값 상승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해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벨트 제도는 120만 명의 국민들을 묶어 놓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 때문에 없어져야 되는 무용지물에 불과한 것입니까? 그린벨트도 지키면서 그 사람들도 구제해 주는 다른 방도를 연구하는 것이 옳지,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평을 잠재우려고 그 제도를 없애려는 것은 아주 단세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경처에게 환경규제 업무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고 대신 환경창조를 위한 아이디어와 시책에 전념하라고 주문하고 싶어요.

안영재 : 규제완화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지요. 우선 신경제에서 경제분야는 몰라도 환경문제는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규제완화라는 표현보다는 환경행정 개선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규제의 핵심이 되는 환경기준이나 배출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없고 어떤 기업의 의무적인 분야별 인력요건을 종합해서 특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유사 업무도 할 수 있게 해서 보다 규제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환경 측면에서의 규제완화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주제로 돌아가서 민간기업이 전념해야 할 연구분야를 보면 첫째, 청정기술에 많은 중점을 두어야겠습니다. 청정기술이란 생산할 때에 오염물질이 적게 나오고 원료가 절약

되고 또 사용할 때도 재질이 독성이 없거나 공해요소가 적으며 폐기물이 많지 않고 또 그 폐기물을 처리할 때 문제가 적은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협약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후변화협약에서는 2000년까지 1990년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동결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합의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타율적으로 강요된 에너지절약이지만 신기술 개발에 의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몬트리올의정서의 경우, 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 개발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겠고, 지금 냉매 대체까지는 아니지만 발포내지 세정 대체물질까지는 개발되었는데, 이것도 장차 규제 내지 사용금지 품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도 생물자원 내지 유전자원의 수출입이 규제되기 때문에 유전공학 분야의 연구도 빨리 진행이 되어야겠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우황청심환과 같은 한약류에 코뿔소 뿔과 호랑이 호골이 들어 있는지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으나 미국은 그러한 나라에 무역규제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끝으로 각종 환경기준은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나 강화되는 추세에 있고 우리도 일부 예규제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수질과 대기분야에서 1996년까지 얼마로, 또 2000년까지 얼마로 하는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처하는 동시에, 외국의 동향도 항상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대기정화법 강화도 우리에게서 자동차를 비롯한 對美수출에 부담이 되는데 이에 적절히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그린라운드나 상계관세에 의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재활용분야에도 많은 연구와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 독일의 어떤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100% 재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자동차 재활용을 비롯해서 각종 가전제품 등에 대한 재활용 기술을 좀더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김태웅 : 좌장께서 말씀하실 때 민간환경단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보다 세분한다면 민간기업과 시민운동단체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이 되었던 시민운동단체가 됐든 제 구실을 하려면 우선 재정자립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특히 시민운동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편법으로 정부에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정부로부터 아무래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겠지요.

또 하나는 아까 조상무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진국들은 총론적인 연구보다는 각론적인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유럽 방문시 독일의 환경연구단체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는 시민단체의 성격을 지니고, 또 하나는 연구소의 성격을 지녔습니다. 후자는 세계야생동물재단(WWF) 산하단체인 아우엔연구소이고 전자는 슈바르츠발트 보존을 위한 시민의 모임입니다. 아우엔연구소는 라인강의 생태계 보전 연구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질 관계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대기 문제도 다루지만 주목적은 오로지 라인강의 생태계를 보존하고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우엔연구소는 런던에 본부가 있는 세계야생동물재단으로부터 우선 재정지원을 받고 기초연구를 시작한 후에, 그 결과를 무기로 해서 정부를 상대로 설득을 하고 정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서 본격적인 연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슈바르츠발트 보존을 위한 시민 모임의 회장은 학교선생이자 시의회 의원인데, 이 분은 한 15년 동안 말 그대로 발로 뛰는 방식으로 환경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없어 저희 자동차로 같이 갈 정도였습니다. 물론 같이 일하는 연구원들도 있는데 이들은 20세 전후의 학생들이거나, 앞으로 환경관련 분야로 진출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공부도 되고 나중에 학계나 직업인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합니다. 이 단체는 독일이 자랑하는 슈바르츠발트의 흑림을 산성비로부터 보호하고 또 피해 지역을 복원하는 연구에만 오로지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활용해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 언론기관에 알리고 이어 검증을 받게 되는데 검증 결과가 100% 맞다고 합니다. 검체를 채취하는 데 순수한 학생들을 동원하니까 믿을 수 있고, 조사결과가 언론에 공표되며, 학생들을 설득하고 교육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지역운동으로 확산이 된다는 것이죠. 이 단체는 현재 산성비 피해에 대한 시민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슈바르츠발트 지역을 지나는 아우토파운 운전자들에게 이 지역을 지날 때만이라도 경제속도를 지켜달라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면서 산성비 피해 원인을 설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활동을 하는데 아직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특정 분야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십수 년간 연구를 하니까 거기에 노우하우가 축적되고 그 나름대로의 대처방안이 나오고 또 실질적으로 본인이 뛰니까 공감을 얻는다는

것이죠.

노용희 : 더 말씀하실 것이 많을 줄 알지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시간에 학계, 기업계, 언론, 정부 측에서 나오셔서 환경보전을 위한 민간기업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고도성장기에 환경문제를 터부시하고 성장을 한 대가로 환경파괴라는 값비싼 희생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나름대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성장론이 우세하고 성장에 부수하는 환경문제를 배려한다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좀 앞장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고, 기업체도 역시 과거의 꿈에서 별로 깨어난 것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의 리우회의를 계기로 해서 환경문제가 국제교역에까지 연계되어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장벽이 대두하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제부터 기업은 정부의 규제와 국제적 추세를 받아들여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첫째, 기업들은 환경산업에의 투자를 확대하고 둘째, 지금 기존의 생산과정 전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질 줄 아는 철저한 환경관리 방식에 맞게 개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정부의 환경정책도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민간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 결국 시장원리에 의해서 설득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는 것이 기업체의 속성이기 때문에, 민간기업들에게 시장경제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환경연구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국제적인 환경동향에 대한 정보분석과, 그것이 국제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같은 예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 성과를 정부는 환경정책에 반영하고 민간기업체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대경제사회연구원도 일본의 미쓰비시 종합연구소와 가시마연구소, 미국의 랜드연구소와 같이 국제적인 연구소로 매년 훌륭한 연구결과를 내놓아 국제사회에서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연구자료가 인용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그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